폼페이오 방북… 북미회담… 김정은 서울 답방…

비핵화·평화정착…한반도 운명 가를 90일 여정 스타트

폼페이오 평양 방문 이달 초 전망 방북 후에 북미회담 윤곽 잡힐 듯 올해 안에 '종전선언' 기대감 솔솔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등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2018년 4·4분기 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세계의 이목이 다 시 집중되고 있다.

우선 비핵화 촉진과 더불어 대북 제재 완화를 앞당기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정 상회담을 조율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10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 통령간 두 번째 만남이 연내 성사될 가능 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올해 안에 예정돼 있어 한반도 문제의 직 접 당사자인 남과북, 그리고 주변국간 '빅 이벤트'가 모두 4분기에 몰려 있는 상태 다.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2차 북미 정상회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줄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시사한 뒤 제2차 북미 정 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 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 예정돼 있는 것.

마치 '4·27 판문점선언'을 포함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12 센토사합의'가 있었던 지난 2·4분기의 판박이다.

일각에선 올해 안에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거의 동시에 갖고 판문 점 등에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함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그 림'으로 그려보고 있다.

3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추석을 전후

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과 미국 뉴욕에서의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의 시계가 더욱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에서 회동을 가진 직후 발표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이달 중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평양으로 초청했고, 이를 미국이 수락하면서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지난 8월 말 네 번째 평양행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가 지지 부진하다고 판단, 취소해 성사되지 모했 다.

국무부는 평양을 향한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발걸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 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에 대해 "아주 조 만간"이라고 밝힌 만큼 실제 평양행은 이 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추석 연휴기 간 뉴욕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의 한미정 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용기와 취한 조 치에 감사한다"면서 "머지않아(in the no t too distant future) 김 위원장과 두 번 째 정상회담을 할 것이고 (날짜·장소 등 이)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두 번째 북 미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 또는 서울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물론 제3국 개최안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회담 장소에 대해 "아마 (싱가포르가 아닌)다른 장소일 것" 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2차 북미회담 시기는 11월 초순 이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미국이 11월6일(현지시간) 상·하원의 원과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를 예정하고 있어 선거 만큼 '빅 이슈'인 북 미정상회담이 미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과 그에 따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경우 10월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의 9월 평양 방문에 대한 답 방 형식으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올 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문 대통령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나는 문재 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덧 붙여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에'라 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 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작년 지방세 고액체납자 1.3만명…1.5조"

이재정 민주당 의원 자료

최근 5년간 최다 인원 기록

지방세 고액체납자 인원이 꾸준히 늘 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3000만원 이상 지 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 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0 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미납한 체납자는 전국 1만3331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최다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조5464원이다.

전국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 자 수는 2013년 1만1304명에서 2014년 1 만1466명, 2015년 1만3043명, 2016년 1만 3108명 등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 운데, 지난해에는 1만3331명으로 최근 5 년 사이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다만 체납 액은 소폭 줄어들어 2016년 1조6501억원 에서 2017년 1조5464원으로 103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월 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고액체납자 수는 지난해 557명으로 2014년 179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737억5200 만원으로 2014년558억원, 2015년 297억 600만원, 2016년 639억4200만원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피하는 인 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더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하 는 지방세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 수 방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5일 '심판의 날'

이명박・김기춘・신동빈・조윤선 줄줄이 선고

MB, '다스 실소유자'가 형량 좌우 신동빈 국정농단 뇌물혐의 항소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의 핵심 주역들이 이달 5일 동시에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돼 관심이 모아지 고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 불법 지원을 기획·실행했다고 의심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지난 보수정권 실세들의 운명이 한날한시에 결정되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350억원대 다스 자 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 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받고 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약 68억원, 재임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두고 "전 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이라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연합뉴

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다스의 실소유 주라는 검찰 주장을 인정해주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이 달라지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판단 결과를 듣는 시간, 바로 아래층의 중법정에는 롯 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부장판사)의 항소심선고 를 듣는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영비리 사건까지 통틀어 선고를 하게 된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로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형량에서 보이듯, 신 회장의 운명을 가를 핵심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 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느냐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2 심 재판부가 이 돈에 대해 뇌물이 맞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신 회장의 입장 에서 불리한 부분이다.

반면신회장 측은 "박전대통령이 유죄라 해도 대통령의 지원 요구를 뇌물로 생각하지 못했던 피고인에게는 별도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한다면, 총수 공백 상황이 길어지면서 그 룹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신 회장 측의 호소가 형량을 정하는 데 변수 로 작용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신 회장의 선고가 진행되는 바로 옆 중법정에는 오후 2시부터 국정농단 사 건의 '지류' 격인 보수단체 불법지원(화 이트리스트) 사건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김기춘전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외에도 박준우·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역 의원인 김재원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법정에서 서울중 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의 판단을 듣는다. 이 가운데 김기춘 전 실장 과 조윤선 전 수석의 운명에 특히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새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국회 대정부질문 재개… '불꽃 공방' 예고

1일 재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여야 간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대정부질문 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경제정 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방에서부터 자 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 보 무단유출 논란을 놓고 여야의 정면충 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은심재철의원을대정부질문자로 내세워 심 의원이 확보한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대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은 심 의원의 행정정보 확보 및 공개를 '범죄·국기문란 행위'로 몰아붙이며 반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남북·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민생경제를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알리고, 한국당은 남 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대북 억지력이 약화 됐고 정부 경제정책의 부작용으로 민생경 제가 어려워졌다고 공격할 방침이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다음 달 1일 외교· 통일·안보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분야로이어진다. 외교·통 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관계 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하이라이트는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 출논란이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상 호고발을 한 가운데 심 의원과 김동연 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면하는 모 습이 연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